

# 與 “자유투표는 야합” 2野 “청와대 개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시한 이틀 앞 책임공방만**  
**나라살림 예·결산도 비상**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일 소집되는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를 이틀 남긴 5일까지 여야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책임공방 벌였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달 31일 모여 국회의장 선출시한인 오는 7일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야합’으로 규정, 두 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도 ‘청와대 배후설’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했다. 국회의장 문제는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원샷’으로 끝내 오는 7일 본회의 개최를 자질없이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에는 의장직을 더민주가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하던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청와대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협상제 개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유투표 발언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아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원구성 협상 거부에 대해 “하루 빨리 국회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배신이며 명백한 가솔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가슴이 살균제,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왜 사과 대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院) 구성 협상이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대로라면 오는 7일 국회의장단을,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완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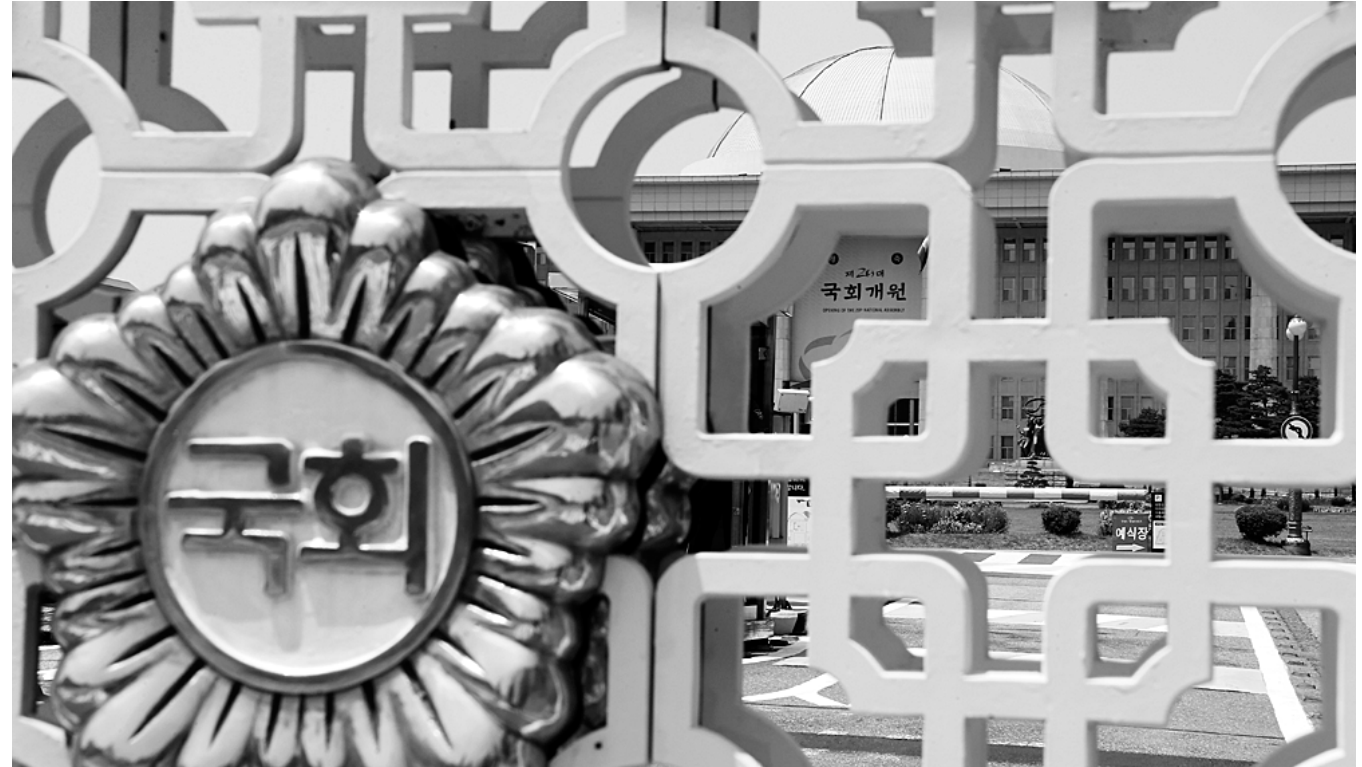
뒤 상임위원으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런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결산 처리는 지난해 법정 처리 시한을 일주일 넘겼고, 이에 앞서 2013년에는 11월 말에 가서야 처리하는 등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까지 협상

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직면할 여론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협상이 결속도록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두 야당도 국회 공전이 길어질 경우 ‘국회 무능론’, ‘발목잡기 국회’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 각각개원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여권으로 돌리면서, 현안·민생관련 당내 TF 활동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 닫힌 국회**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되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원(院) 구성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문 창살 뒤로 국회가 보인다. /연합뉴스

## 박대통령 귀국...산적한 난제 풀어낼까

민생·경제살리기 앞세워 대치 국면 정면돌파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하면서 산적한 각종 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 주목된다.

임기를 3분의 1 가량 남겨놓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완수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달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찬성해온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전격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 청문회’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주력사업들에 제동이 걸려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어버이연합 사태를 포함한 5대 현안에 대해 ‘1

특별법 4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해 청와대에 맞붙을 냈다.

또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배후설’까지 주장하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되는 분위기다.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라는 키워드로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대치 국면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도 순방 후 우선 순위로 챙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대화에서 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의원 조훈현 1호 법안 ‘바둑진흥법’

영양 출신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이 국회 입성 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바둑 관련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원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법조문 정리를 거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바둑지도사 양성, 바둑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바둑기보를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바둑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바둑 지원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바둑진흥법 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미진했던 이유를 분석해 이번 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둑은 사교력 배양, 인성·정서 함양 등의 효과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바둑의 재도약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된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전반적으로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

인 복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4000여명 인사권·5560억 예산권 보좌진 국회의원 3배 가까운 23명

### ■ 국회의장 권한과 위상

여야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이유는 권한과 위상이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의장은 이른바 ‘5부 요인’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가운데 의전 서열 1위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다. 대통령이 타는 차량이 ‘1001’번이고 국회의장이 타는 차량은 ‘1002’번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4000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인사권을 살펴보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 인사인 국회도서관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등을 정할 수 있다. 급여와는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도 제공된다.

보좌진만 해도 일반 국회의원이 9명인 것에 비해 국회의장은 23명을 둘 수 있다. 이중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외교부에서 파견한 의전담당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공관도 제공받는다. 3층짜리 건물인 국회의장 공관은 대지면적 2900평, 연면적 약 660평에 달한다.

여야가 국회의장을 놓고 쟁투를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임위와 상관없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도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임동욱기자 tuim@

##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벌써 100건 재탕·삼탕에 비용추계 부실 수도륙

제20대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법안 발의가 100건에 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법안의 양(量)보다 질(質)에 있다.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개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5건에 그쳤다.

48건의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을 지켰지만 나머지 법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도 않았고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거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시의적절한 발의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동철 의원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장병영 의원은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새누리 10일 첫 정책워크숍...최대쟁점은 탈당파 복당

새누리당이 오는 10일 개최하는 20대 국회 첫 정책워크숍에서는 무소속 탈당파의 복당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의 복당 여부가 전적으로 혁신비대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서는 이번 워크숍을 전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

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현재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복당 결정권을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탈고 가져와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차기 지도부체 개편, 당권·대권 분리 등 당내 현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모집

##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